

세계 일류국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전망

김 창 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

I. 개 요

전자정부(e-Government)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정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를 말한다. 아울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정부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단계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행정정보화를 추진해 왔으나, 전자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2월 전자정부를 국민의 정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2002년까지 전자민원 단일창구(G4C) 등 11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전자정부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조달, 특허, 관세 등 부처별·단위업무별 정보화는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UN이 분류한 전자정부 수준 5단계중 제4단계(Transaction)에 속하는 상위 9%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4단계는 정부의 업무처리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며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사용자료를 지불할 수 있는 단계로, 2002년 당시 미국, 캐나다 등 17개 국가만이 도달한 수준이었다. 다만, 부처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국민을 위한 부처간 경계없는 종합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3년 참여정부는 변화와 개혁, 분권화와 자율화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혁신을 구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자정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기본계획으로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총 9,8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II.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현황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4대 혁신방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10대 아젠다, 31대 우선추진과제(표 참조)가 선정되었다. 4대 혁신방향이란 참여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일하는 방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림) 전자정부 로드맵 비전과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
- 일하는 방식 혁신
 - 종이문서방식 ⇒ 전자문서방식
 - 부서별 업무처리 ⇒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
- 대국민 서비스 혁신
 - 기관별 창구, 방문·대면처리 ⇒ 단일창구, 무방문 온라인 처리
 - 제한적 참여 ⇒ 전자적 참여 확대
- 정보자원 관리 혁신
 - 기관별, 업무별 자원관리 ⇒ 법정부적 통합관리
 - 부문별 표준 ⇒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성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2003년에는 전자정부 로드맵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조직을 정비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4년에는 각 과제별로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와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고, 전자정부 공동서비스(Shared Service)⁹⁾ 발굴,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2005년부터는 BPR/ISP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시스템 통합과 보급·확산,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2007년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성과를 가시화 할 계획이다.

III. 전자정부 추진성과 및 계획

한국의 전자정부는 UN에서 세계 5위⁹⁾,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세계 1위⁹⁾로 평가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도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부터 정부 주도로 범국가적인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이며,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필자에게도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다.

[표] 전자정부 혁신분야 및 31대 로드맵 과제

| 혁신분야 | 아젠다 (10개) | 우선추진과제 (31개) | 주관기관 | | | | |
|-----------------------------|-------------------------|--------------------|---------------------|----------------|--------------|--|--|
| 일하는 방식 혁신 |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 1. 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 행정자치부 | | | | |
| | |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3. 전자지방정부 구현 | 행정자치부 | | | | |
| | | 4. 전자감사체계 구축 | 감사원 | | | | |
| | | 5. 전자국회 구현 | 국회사무처 | | | | |
| | | 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 법무부 | | | | |
| | |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 인사위/행자부 | | | | |
| | | 8. 외교통상정보화 | 외교통상부 | | | | |
| | | 9.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 행자부/대통령비서실 | | | | |
| | | 10. 행정정보공유확대 | 행정자치부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으로 업무재설계 |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 행정자치부 | | | | | |
| |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 행정자치부 | | | | | |
| | 13. 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 | 소방방재청 | | | | | |
| | 14. 건축도지등기연계 및 고도화 | 건교부/행자부 | | | | | |
| |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 국세청 | | | | | |
| |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 보건복지부 | | | | | |
| |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 식약청/농림부/해수부 | | | | | |
| | 18. 고용취업종합정보서비스 | 노동부 | | | | | |
| |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 법제처 | | | | | |
| |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 산업자원부 | | | | | |
|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 해수부·관세청 | | | | | |
| | 22. 전자무역서비스 | 산자부·관세청 | | | | | |
| | 23.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 산자·노동·법무부 | | | | | |
| | 24. 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 | 정보통신부 | | | | | |
| | 25. 온라인국민참여확대 | 행자부/고충위/선관위 | | | | | |
| | 26.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 정보통신부 | | | | | |
| | 27.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 | 정보통신부 | | | | | |
| | 28.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 정보통신부 | | | | | |
| |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 국정·행자·정통 | | | | | |
| | 30. 정보화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 행정자치부 | | | | | |
|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 31. 전자정부구현 및 안전성관련 법제정비 | 행정자치부 | | | | | |
| |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 | | | | | |
| | |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 | | | | |
| | | |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 | | | |
| | | | | 정보화 인력·조직의 전문화 | | | |
| | | | | | 전자정부관련 법제 정비 | | |

01. 전자정부 공동서비스란 전자정부 시스템의 중복개발 방지와 자원 공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한 것으로, 현재 9개 서비스가 제공중
-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PKI), 통합인증(SSO), 단방향문자서비스(SMS), 사용자 디렉토리(LDAP), 웹서비스 등록자장소(UDDI)
02. UN은 세계 19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준비도 평가에서 한국을 5위로 평가하였으며, 최고수준(5단계) 진입율도 80% 이상인 것으로 평가(UN, e-Rediness Review, 2005. 12)
03. 미국 브라운대학(공공정책센터)은 2001년부터 매년 전 세계 200여개 국가의 정부 웹 사이트를 조사하여 전자정부수준을 발표하여 왔으며, 2006년에는 한국을 1위로 평가(브라운대학, 2006. 8)

한국 전자정부의 현황과 성과를 정부 내부(G2G, 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와 국민간(G2C, Government to Citizen), 정부와 기업간(Government to Business), 정부 자원관리(Infrastructure)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내부간 전자정부 서비스

(G2G, Government to Government)

문서의 처리에 있어서는 문서의 생산부터 이관·보존까지 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행정기관이 문서를 전자적으로 유통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2월 문서의 전자적 처리가 의무화되었고, 2003년까지 58개 중앙행정기관과 전 자치단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2004년부터 전자결재와 전자적 문서유통을 시행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평균 전자결재율은 98.2%, 전자문서 유통율은 97.3%로 전자적 문서처리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부터 전자문서유통 대상기관을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정부와 문서수발신 빈도가 높은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기록물관리도 업무처리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기록하도록 전환하고 있으며, 기록물 수집부터 보존, 정보공개, 활용, 폐기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있다. 국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연간 약 2억 9천만통⁰⁴의 행정기관 발급 서류를 없애기 위해 정부기관간에 약 70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도 추진 중이다. 2002년 11월부터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분야에 대한 20종의 행정정보는 국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680여 만원사무 처리시에 소요되는 20종의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행정기관으로 한정된 공동이용 대상기관도 공공기관, 일부 민간기관과 금융기관⁰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주민등록관리, 건설 인허가 등 공통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자치단체의 표준시스템 개발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절차 간소화 및 전자적 처리를 통

한 업무효율성이 향상된 것이다. 또한 시도 정보연계활용센터를 구축하여 '중앙부처→시도→시군구' 간 정보유통채널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수작업으로 18개 중앙부처에 보고하는 1,237종의 항목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게 되었다.

국가 재정관리에 있어서는 현금주의·단식부기방식을 선진회계제도인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전환하고, 2007년까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통합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부터 운영중이며, 지방재정은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확산중이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에도 2007년까지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도 교육청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각 재정 영역에서 실시간·전자적 처리기반이 완료되면 2008년부터는 통합재정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재정위험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 본부와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 간에도 안전한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가 구축되어 정보공유와 전자적 문서유통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권 발급이나 호적·국적 확인시 평균 몇 주가 소요된 영사민원업무도 대폭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대사관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내 가족이나 친지에게 요청해서 우편으로 받아 제출하고, 대사관측에서는 신원조회나 과거 여권발급 기록 조회 등을 위해 한국에 문서로 발송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40개 재외공관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영사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재외공관별로 분산·운영하던 68개 서버도 미주(미국)와 구주(프랑스)의 2개 데이터센터로 통합하였다. 서버 통합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장성이 향상되었으며, 각 공관의 관리부담도 크게 경감하였다. 외교통상정보화(e-Diplomacy)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무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수사(경찰), 기소(검찰), 공판(법원), 집행(법무부) 등 형사사법 관련 절차를 표준화·전자화하고 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중이다.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찰에, 법원의 공판자료를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전달 또는 공유함으로써, 수

04_연간 약 4억4천만통의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중 발급빈도가 높은 70종의 민원을 공동활용하는 경우 약 2억 9천만통의 민원서류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행정자치부, 2006. 7)

05_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의 50% 이상이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 제출용임을 감안(주민등록증명 실태조사, 2004.10)

기입력 또는 이중입력을 방지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약식재판의 경우 평균 약 60일에서 20일 미만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국민은 형사사건에 대한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005년에는 수사지원분야, 2006년 조사결정분야, 공판 및 집행 분야의 정보공유시스템, 2007년에는 통합민원창구를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다.

2. 정부와 국민간 전자정부 서비스 (G2C, Government to Citizen)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민원안내뿐 아니라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가 2002년 11월부터 서비스 중이다. 2006년 6월 현재 5,000종의 민원안내, 650종의 온라인 민원신청,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29종의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가 제공 중이다. 이용량도 2002년 서비스 개통당시 1일 1,000건 미만에서 2006년 6월 45,00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43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국세 신고, 고지, 납부가 가능하고, 각종 국세관련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 열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도 제공 중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14종중 빈도가 높은 12종에 대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었으며, 2006년 6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453만명에 이르고 전자신고비율이 법인세 96.99%, 종합소득세 81.2%, 부가치세 76.6%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전자세정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들이 10여년간 노력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분야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복지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장애인,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수혜대상자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복지정보포털(www.e-welfare.go.kr)도 있다. 2004년 장애인 분야, 2005년 노인 분야, 2006년에는 아동, 여성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복지정보포털과 시설간 정보공동이용체계를 구축

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충민원과 국민제안에 대한 통합창구로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를 구축하여 2005년 7월부터 서비스 중이다. 이 포털을 통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은 7일 이내, 제안은 30일 이내 단일창구에서 처리 중이며, 여러 기관이 협조하여 처리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도 44일에서 22일로 단축되었다. 이 시스템으로 민원처리시간도 5.3일에서 1.6일로 단축되어 민원인 만족도도 증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부터 정보획득까지 인터넷 단일창구에서 처리하고 있다.

3. 정부와 기업간 전자정부 서비스 (G2B, Government to Business)

수출입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유사·중복적인 서식을 표준화하고, 물류 주체간에는 정보를 공동 활용토록 하고 있다. 2006년 8월까지 입출항보고, 수입신고서 등 18종 유사 서식을 표준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선사 등 항만물류주체간 정보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였다. 2007년 2월까지 항만, 항공, 환적, 통관 등 수출입물류분야 화물추적서비스를 확대하고 유관 정보망을 연계할 계획이다. 항만물류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업무처리건수가 2006년 3월 650건에서 2006년 6월 1,446건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립검역소 검역관리시스템의 업무처리시간도 건당 평균 87분에서 2분으로 매우 신속해졌다. 아울러 요건확인 신청 및 수입 신고 동시 신청으로 인한 통관 소요시간도 4.5일로 평균 1일 단축되었다.

마케팅, 외환·결제, 상역, 통관·물류 등 모든 무역업무의 단절없는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무역서비스(e-Trade Platform)도 구축 중이다. 2004년 전자신용장(e-L/C) 유통관리시스템, 전자문서보관소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2006년에는 외환·결제, 상역분야 무역업체용 사용자 단일창구, 적하보험증권 등 전자무역 주요문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7년에는 수출입대금결제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정부내부의 전자정부 자원관리 (E-Government Infrastructure)

부처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산자원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2007년까지 2개의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고,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을 이전할 계획이다.

제1센터는 대전에 임차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06년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관세청 등 24개 기관의 시스템을 이전하였다. 특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행정자치부의 전자민원서비스, 주민등록시스템 등은 시스템 이전중이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들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대체 시스템⁷⁾을 구축하고 서비스 중단 없이 시스템을 이전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2006년 4월부터는 통합운영서비스 개시,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실시, 6월 자체 침해사고대응팀(CERT) 구성 등을 완료하였다. 2센터는 광주광역시내에 약 2만6천m²(약 7,8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중이다. 2007년 6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시스템을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 기관별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들이 통합전산센터에서 통합·운영됨으로써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 기존에는 기관별 또는 단위시스템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통합 운영·발주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안관제 등 공통 업무를 통합지원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SO 20000 국제인증 수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보안 강화로 전자정부 시스템의 안정성 향상도 기대된다. 통합전산센터의 ISO 20000 국제인증(2006년)은 공공기관 세계 최초이며, 각 개별 전산실에서 운영하던 수준이 전문화된 증거이기도 하다.

IV. 향후 추진계획 및 방향

2007년은 참여정부의 로드맵이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우선 당초 계획한 전자정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정비에 대한 점검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전자정부 전략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 중장기 발전전략은 정부 역할의 변화,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IT 산업정책과의 연계 강화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정부 역할의 변화 대응

정부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으로 규제와 관리중심에서, 경제개혁을 통한 효율과 성과지향의 정부전략, 그리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혁신 등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다. 장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공급자와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의 역할은 지배자가 아닌 조정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속도(Speed)와 유연성(Flexibility)이 요구된다.

전자정부는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정부 규모의 축소와 같은 외형적인 목표 달성에 그치지 않고, 정부 내부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전자정부 서비스가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철저히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절차의 확보와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참여확대로 국민주권 확보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IT산업 발전전략과 연계

아울러, 전자정부 사업은 국가가 수요를 창출하는 주요 정보화사업⁸⁾으로서, SW산업 등을 비롯한 IT 산업 발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IT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의 IT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2005년말 기준으로 GDP의 15%, 경제성장 기여도의 46.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IT산업중 SW산업은 가장 빠르고ダイナミク하게 성장⁹⁾하고

07_무중단 시스템 이전을 위해 구축한 대체시스템은 이전 완료후 백업시스템 등으로 활용

08_정부의 정보화 투자규모는 2007년 기준 약 3조 4천억원이며, 이중 전자정부 예산은 약 7,038억으로 약 20.7%를 차지(2006년 전자정부 연차보고서, 행정자치부, 2006.12)

09_세계 SW산업은 약 6.8%의 성장률로 2010년에는 그 규모가 약 9,080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세계 10대 IT기업 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IT장비기업 성장률 1%, SW기업 성장률 6%(OECD, 2004)

부가가치가 높은¹⁰⁾ 분야일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로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할 만한 분야이다. 더욱이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2005년 12월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SW산업 발전전략'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SW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골자는 IT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대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패키지 SW의 선도·중견 기업 육성 등이다. 전자정부 사업에서도 발주자의 불합리한 구매 관행,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하여 SW의 제값을 주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우수제품(GS, Good Software)에 대한 우선구매 또는 도입 권고제도 등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전문 IT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 SW 도입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¹¹⁾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홍보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은 국내 IT기업 육성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되어야 하며, 이제는 충분히 성장된 IT 시장과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때이다.

3. 유비쿼터스 사회 준비

유비쿼터스 등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 환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정보기술은 급변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로 통칭되는 기술 환경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사회에서 정부서비스는 누구나(anyone)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다양한 기기(any device)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별 요구사항과 특성, 선호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인프라에 이식된 센서(sensor)나 태그(tag)를 이용해 환경, 사물, 사람에 대한 상황 인식 정보를 감지함으로써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음 20년을 위한 준비로 'u-Korea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u-정부 실현을 적극 추진중이다. 공공부문에 RFID, 텔레메틱스, u-City 등 유비쿼터스 기술이 이미 일부

도입되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도 유비쿼터스 기술을 보다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대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을 비롯한 PDA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반의 전자정부(M-Government) 서비스도 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모바일 행정시스템 도입은 현장 행정처리 비율을 높여 중복 입력으로 인한 오류 감소뿐 아니라 실시간 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화물의 추적을 통한 물류유통체계 개선, 국방부 탄약관리, 감염성폐기물관리 등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손쉽게 TV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텔레비전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T-Government)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감시·통제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고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약 령



1977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8년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계산학(석사)
 2001년 고려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2002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1976년 제12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1993년 ~ 1994년 체신부 통신정책실 기술심의관
 1994년 ~ 1995년 미국 콜롬비아대학 정보통신연구소 초빙연구원
 1997년 ~ 1998년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1999년 ~ 2000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2000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2000년 ~ 2001년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2001년 ~ 2003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2003년 ~ 2004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2004년 ~ 2005년 제8대 정보통신부 차관
 2005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05년 - 현재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김 향 곤

10_ 산업별 부가가치는 SW가 62.7%로, 서비스(50.1%), 제조업(27.4%)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음(KISDI, 2003.12)

11_ 외국기업체의 평균 1인당 매출액은 4억 6,294만원으로 국내업체 약 9,907만원보다 약 4.6배가 많음(전자신문 조사, 2006.12)